

해방 전후 제주 잠수(해녀)들의 부산 정착의 사회사적 고찰*

: 지역 간 경계를 넘은 이동과 갈등을 중심으로

안미정*

< 차례 >

- I. 머리말
- II. 섬에서 바깥으로 이동
- III. 객주와 잠수의 사회관계
- IV. 해방 후의 분쟁과 정착
- V. 맺음말

국문요약

식민지시대부터 1970년대 초반까지 제주도 마을의 여성들은 무리지어 섬 밖으로 나가 해산물을 채취한 후 목돈을 마련하여 고향으로 돌아가는 반복적 이동을 행해왔다. 이 글은 이러한 여성들의 이동을 사회적 변동 속에서 그 이동의 성격을 조명해보고자 하였다. 이동이 식민지 시대에 집단적 양상을 띠며 촉발되었다는 점과 특히 잠수들의 이동에 있어서 부산이 거점이 되고 있었던 점, 그리고 해방 후 현지에서 일어난 분쟁에 초점을 두어 살펴보았다.

잠수들의 이동은 식민지 시대에 촉발되고 가속화된 것으로 이는 식민지 수산물 상품경제 하에서 이루어진 체계적 이동이었다. 개항 이후 부산을 거점으로

* 이 논문은 2008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이다(KRF-2008-361-B00001). 이 논문을 자세히 검토하여 논평해주신 세 분의 심사위원들께 깊이 감사드린다.

** 한국해양대학교 국제해양문제연구소 HK연구교수, 문화인류학 전공.

형성되어 온 객주들은 해산물이 수요를 가진 일본 해조상인들의 자금을 대부받고 제주도의 잠수들을 모집하여 여러 어장으로 이동시킬 수 있었다. 일본의 군수산업 및 산업발전에 따른 해초의 수요가 유통상인 집단으로서 객주를 매개로 하여 채취자 잠수들의 이동을 촉진시켰던 것이다. 즉 해산물을 둘러싼 제 관계에 있어서 잠수들은 채취자(생산자)로서 가장 하부단위에 위치하고 있었으며, 차별적 분배의 구조적 고리 안에 놓여 있었다.

활발하였던 잠수들의 타지 이동은 수산 상품(자원)을 쫓아 자원획득을 도모하였던 식민지 수산경제체제 하에서 이루어진 '자유입어' 활동이었다. 즉 지역 주민의 자원권보다 자원의 상품적 필요성이 타지 이동의 자유를 암묵적으로 용인한 식민지수산경제 속에서 전개된 것이다. 해방 후, 정주(定住)를 기본으로 한 수산업법의 제도화 과정에서 식민지시기의 관행은 지역 간 갈등의 양상으로 나타났다. 이를 연구자는 식민지 시기 이동채취의 자유와 해방 후 정주자의 채취권 간의 갈등임을 지적하고, 지역 간의 경계를 넘나들며 자원을 채취할 수 있었던 이동의 자유는 본질적으로 자원획득의 목적을 둔 식민지 상품경제 하에서 용인되었던 자유임을 지적하였다.

주제어 : 잠수(해녀), 이동, 갈등, 입어권, 식민지 수산경제, 객주, 부산, 제주도

I. 머리말

일제 식민지시대 동안 한반도의 남쪽 끝, 제주도의 여성들은 봄이 되면 무리를 지어 몇몇 남성의 인솔을 따라 한반도의 여러 섬과 나라 밖의 어장에서 해산물을 채취하다 추석 때가 되어 고향으로 돌아가곤 하였다. “바깥물질”이라고 하는 이 제주 잠수(해녀)들의¹⁾ 반복적인 어로패턴은

1) 잠수(潛嫂)는 흔히 해녀라 불리는데, 얇은 수중에서 자맥질을 하여 해산물을 채취는 여성들을 말한다. 제주에서는 잠녀(潛女)라는 말과 함께 보편적으로 사용되어 왔다. 과거에는 미혼의 여성들도 많았으나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기혼 여성들만이 종사하고

식민지 시대로부터 시작하여 1960년대까지 이어져 왔다. 이들의 이동은 단지 제주사회의 내적 변동에 의해서 촉발되었던 것이 아니라 식민지 체제하에서의 만들어진 외적 변동과도 긴밀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 이동에 대해서는 제주사회에 미친 경제적 기여에 대한 주요 담론만을 형성하고 있을 뿐, 이동에 얽힌 내외적 영향에 대해서는 간과되어 왔다. 이 여성들의 바깥물질은 근현대 한국사회의 변동과 무관하게 전개된 한 가정의 혹은 한 지역사회 여성들의 경험이었던 것만 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내외부적 사회변동 속에서 전개된 근현대 여성의 노동으로서 조명되어야 한다고 본다. 삶의 애환, 타향살이의 시름, 그리고 이동한 곳의 현지 주민들과의 분쟁 등은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소개 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²⁾ 이들의 타지 이동이 어떠한 사회문화적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그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함이 왜 해당 지역에서는 분쟁의 소지가 되었는지에 관해서는 다루지지 못하였다.

그동안 제주 잠수들의 타지(他地) 이동을 둘러싼 여러 담론들은 그들의 위상을 제주도 지역 사회 안에서 찾아 왔다. 아마도 그것은 이들의 노동이 가계경제뿐만 아니라 제주도 지역경제에 크게 기여해 온 배경에 기인한다고 본다. 이러한 노동의 역사와 더불어 잠수들은 강인하고 근면한 제주여성의 전형으로 상징되어 왔다. 하지만 이들의 노동은 여성

있는 점도 한 특징이다. 제주도의 잠녀가 일본인들이 사용하는 '해녀(海女, 아마, あま)'라는 용어로 널리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타지로 이동하기 시작하기 시작한 식민지시대부터라는 주장이 있다(오선화 1998), 필자는 제주도 잠수의 긴 역사와 사회적 배경을 고려하여 식민지 시대에 한정하지 않고 문화형성의 주체로서 제주도 출신의 여성어로자들이 사용하여 온 '잠수'를 해녀와 구분하여 사용하도록 하겠다. 다만, 다른 연구자들이 언급하고 있는 지칭에 대해서는 그대로 원용하였음을 밝혀둔다.

2) 강대원(2001), 김수희(2006), 좌혜경 외(2006) 등의 연구를 통해 분쟁 내용이 다루져 왔고, 당시의 정황을 보여주는 신문자료 모음인 제주도·제주도여성특별위원회(2002)를 참조해 볼 수 있다.

의 가내노동이라는 범주 안에서만 그 의의가 강조될 뿐 그것이 어떠한 사회적 배경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며 한국 근현대 변동과정과 연결하여 파악하는 연구는 아직 미약하다. 식민지시대에 ‘활발하게’ 타지로 이동하던 양상은 분명 이전·이후의 시기와는 다른 양상이었음에도 이러한 여성들의 이동은 개인적으로 인성의 강인함과 근면한 여성상을 보여주는 한 단면으로만 치우쳐져 왔던 것이다. 이는 일하는 여성의 강인함과 근면함을 아름다운 미덕으로서 숭상하는 의미가 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 여성들의 노동이 갖는 시대적 위상을 보여주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사실은 기존 연구의 관심이 편중되어 왔던 데에서도 알 수 있다. 이동의 경험담을 채록한 민속학적 연구보고(김영돈 1999)와 구술사 자료집(제주도·제주도여성특별위원회 2004), 일본으로 간 잠수들의 이야기(김영·양정자 2004[1988]) 등 타향살이의 이야기는 상당히 축적되고 있으나, 반면 이와 같은 이동과 정착에 관심을 둔 논문은 드물다. 부산에 이주한 잠수의 생활사(최성애 1995)와 경상북도 죽변에 정착한 잠수들의 적응과정(오선화 1998), 그리고 전라남도 완도에 정착한 잠수의 생애사(양원홍 1998) 등의 연구가 있을 뿐이다. 그리고 여성들의 사회적 이동의 함의나 성격보다는 정착하게 된 개인의 생애과정에 보다 초점을 두고 있다. 풍부한 경험담과 구술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이동에 대한 관심이 미약한 것은 사회적 변동과 연관 속에서 여성의 이동을 유의미한 현상으로써 고려하지 못했기 때문이라 여겨진다. 곧 사회변동과 관련하여 개인·집단의 행위를 조명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문화변동론의 관점에서 잠수들의 ‘이동’에 초점에 두자면, 그것은 특정 시공간이 달라짐에 따른 변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에 동반하는 여러 사회적 경계, 예를 들면 한 사회의 제도와 관습 및 규칙과 문화적 규범 등의 변화를 상호 밀접한 관계 속에서 파악해 보게 된다. 즉 한

사회의 문화를 분석함에 있어, 시간적 차원의 어느 한 시점과 시간의 변동 과정에 초점을 둬으로써 문화가 시간적인 차원에서 존재하고 있는 하나 어느 일정한 시기에 그 문화체계를 구성하고 있는 부분들과는 어떻게 상관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보는 것도 또한 중요하다.³⁾ 특히 제주도 주변이 아닌 다른 지역의 어장으로 이동함에 따라 사회적 마찰과 분쟁이 도출되는 등 잠수들의 이동 어로행위는 그것이 사회경제적 행위인 동시에 어떠한 사회적 경계를 넘는 행위이기도 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잠수들의 이동하며 어로를 행해왔던 바깥물질의 역사는 한 지역의 고정된 문화로서가 아니라 상호 연관된 다른 지역과의 관계 속에서도 파악되어야 한다. 그럼으로써 제주 잠수 문화를 정태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어떤 완결체로서가 아니라 다양한 사회 계 관계 측면과 관련해 봄으로써 변화에 응대하며 형성되어가는 그 문화적 역동성을 볼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잠수들의 이동은 일제강점기에 국한된 양상이 아니었으며, 또 한 장소만을 향해 나간 이동도 아니었다. 제주도를 떠나 육지의 남해안 지방으로 나가 정착하기 시작한 것은 15세기 후반 무렵부터라고 하며 당시의 출륙(出陸)은 흉년과 재해, 부역과 공물의 가중 및 왜구의 출몰에 의한 것이었다(이기욱 2003: 48; 조성윤 2005: 58). <조선왕조실록>에서도 15세기 후반에 전라남도와 경상도 지방으로 나간 제주사람들에 관한 기록이 자주 등장하는데, 이들은 처자를 데리고 해안가에 집을 짓고 살고 있었다.⁴⁾ 이처럼 유민과 같이 재해와 기근으로 인해 섬을 떠났던

3) 한상복·이문용·김광익, 2009[1985], 『문화인류학 개론』, 서울대학교출판부, p.399 참조

4) 성종 8년(1477년)과 14년(1483년)의 기사 내용을 참조함(조선왕조실록 검색 <http://sillok.history.go.kr>). 이때의 기록에는 경상도 사천(泗川)과 고성(固城)·진주(晉州) 지방에, 제주(濟州)의 두독야(豆秃也)라고 칭하는 사람들이 고기잡이와 미

것은 이주를 목적으로 한 이동하였다고 하겠으며, 귀향을 전제로 한 이동은 아니었다. 또한 이 시대의 해산물은 진상품으로서 성격을 가지며, 상품경제하에서 거래되는 시장의 “물건”(상품)과는 다르다.

이 글에서는 수산물의 상품경제가 확산됨에 따라 섬을 떠나 한시적으로 현지에서 어로를 행했던 잠수들의 반복적 이동 및 이후의 정착을 초점에 두고자 한다. 시대적으로 보면, 한국의 근현대로서 구체적으로는 식민지시대와 해방 후 1970년대 중반까지에 해당한다. 이동해 간 지역들 가운데에서도 유독 경상도 지역, 그 안에서도 부산 지역으로 나간 잠수들이 현저히 많았다.⁵⁾ 그러므로 이러한 사회적 이동은 잠수 개인의 의지에 의한 자발적 선택이었다는 점 외에도 제주도에서 나간 이동의 유출요인과 특정 지역으로 이동한 그 지역의 흡입 요인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이동이 전개된 사회적 배경과 함께 특정 지역으로의 이동이 선호되었던 이유에 대해서도 살펴보려고 한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갈등을 통해 그들의 이동이 어떠한 사회적 맥락을 띠고 있었는가를 알아보려고 하며, 이로써 갈등의 성격도 조명해볼 수 있으리라 본다. 다시 말해, 근현대 여성어로집단으로서 제주도 잠수들의 타지로의 이동이 갖는 사회적 성격과 그러한 지역 간 경계의 넘나들이 사회적 갈등으로 전화(轉化)된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이 글은

역 채취를 업으로 하며 살고 있다고 한다.

5) 타지에 정주하고 있는 잠수들의 현황에 대해서는 강대원의 저술(2001년)에 자세히 언급되어 있다. 1995년 집계된 제주도 출신 현지 정착한 전국의 잠수인구 통계를 보면 총 1,975명으로, 부산 508명, 경남 733명, 경북 288명, 강원 210명, 전남 137명, 충남 99명이었다(p.272). 또한 1990년 7월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전국 17,633명의 잠수 가운데 제주도가 10,027명으로 과반수를 차지하며 그 다음으로 경남이 4,498명으로 전체의 25.5%를 차지한다. 소속된 조합으로 말하자면, 제주 이외의 지역에서는 영일(1,053명) 다음으로 부산(728명)이 가장 많았다(p.321).

‘경계를 넘나든다는 것’의 사회적 수용과 갈등을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가 되리라 본다. 아울러, 현재 정착하고 있는 잠수들의 생활세계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선행 연구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하겠다. 먼저, 식민지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 바깥물질의 사회적 요인 및 그 양상을 짚어보도록 하겠다.

II. 섬에서 바깥으로 이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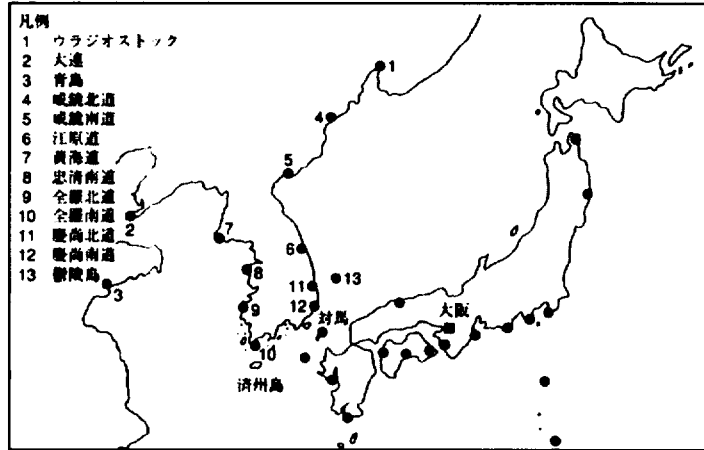
1. 식민지 수산경제와 이동

한시적으로 다른 곳에 이동하여 해산물을 채취하고 경제적 소득을 꾀한 잠수들의 어업활동을 잠수들은 “배깃물질 나간다”라고 한다. 배깃물질이란 ‘바깥물질’을 뜻한다(김영돈 1999: 384).⁶⁾ 이와 같이 섬을 떠나 ‘바깥’으로 나가 “물질”하였던 것은 1879년 전라남도 청산도였다고 하거나(최성애 1995: 65), 1880년 경상남도 울산과 기장을 비롯하여 전라남도 다도해 각 도서와 거제도, 부산 근해, 경상북도 각 연해와 강원도, 함경도까지 이르게 되었다고도 하며(강대원 2001: 106), 1895년 부산의 영도였다는 주장도 있다(진관훈 2004: 259). 대략적으로 보면, 19세기 후반부터 제주도 잠수들의 타지 이동이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 첫 이동지역으로 한반도의 동남해 지역이라고 보는 데에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이후 잠수들은 조선 전역과 일본, 중국의 대련, 청도, 러시

6) 이외에도 “출가”(出稼, 데카세키)라는 일본식 용어를 붙여 “출가물질”이라고 지칭되기도 하지만 이는 학자들의 명명이고, 실제 잠수들의 경험담을 들어보면 특정 용어가 있는 것은 아니다. “바깥”이란 섬의 밖을 지칭하는 것으로서 한반도와 일본 등 타지를 지칭한다.

아의 블라디보스톡까지 이동하였다(김영돈 1999, 강대원 2001, 이성훈 2008,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박물관 2009). 다음 <그림 1>은 제주도 잠수들의 이동하였던 지역적 범위를 잘 보여준다.

<그림 1> 제주도 잠수의 바깥물질 지역(1895년~1945년)



자료: 李善愛, 2001, 『海を越える濟州道の海女』, 明石書店, p.34.

바깥물질이 '활성화' 된 것은 식민지 시대에 들어와서이다. 1910년대 전반에는 2,500명에 이르던 이동자가 1910년 후반에는 부산 울산 지역의 이동자만 4천명을 헤아리게 된다(진관훈 2004: 259). 한반도 연안과 일본으로 나간 잠수들의 이동 현황은 <표 1>과 같다.

<표 1> 1930년대 잠수들의 이동지역과 인구수

(단위: 명)

연도	지역	전남	전북	경남	경북	충남	강원	함남	함북	황해	합계
		1937	408	19	1,650	473	110	54	32	5	50
1937	일본	對馬島	高知	鹿兒島	東京	長崎	靜岡	千葉	愛媛	徳島	합계
		750	130	55	215	65	265	51	10	50	1,591
1939	한반도	전남	전북	경남	경북	충남	강원	함남	함북	황해	합계
		367	7	1,581	308	141	60	106	-	14	2,584
	일본 외	對馬島	高知	鹿兒島	東京	長崎	靜岡	千葉	愛媛	青島	합계
	686	95	18	144	54	365	67	35	28	1,492	

- 1) 1939년 *청도는 중국의 칭따오를 말한다.
- 2) 일본과 일본 외 지역의 합계는 인용 원문(강대원 2001: 146)의 오차를 정정하여 제시하였다.

1930년대 후반에 이르러 타지로 이동한 제주 잠수들의 인구는 4천명을 넘었으며, 반복적으로 고향과 타지를 오갔다. <표 1>에 언급된 여러 지역들 가운데에서도 유독 경상남도에는 압도적으로 많은 수의 잠수들이 이동하였다. 일본 안에서는 대마도(對馬島)가 다른 지역들보다 월등히 많다. 해역을 고려해서 보면 한반도의 남동해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잠수들은 타지에 가서 경제적 벌이를 위해 한시적으로 노동을 한 후 귀향을 하는 패턴을 띠고 있었다(김영돈 1999, 강대원 2001, 좌혜경 외 2006). 이러한 노동 패턴은 잠수들이 아예 섬을 떠나 다른 곳에 정주(定住)하기 위해 이동하였던 것은 아니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것은 한반도 연안만이 아니라 일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다. 잠시 식민지 시대에 전개된 이동의 양상을 살펴보자.

<가>

出稼는 매년 2월경부터 시작되는데 우선 경상남도와 전라남도의 비교적 근거리로 출어해 점차 북쪽으로 옮겨 8월말을 한도로 歸島해 가을건이에

중사하게 된다. 출어방법으로는 경남 경북 전남 전북 쓰시마 등 지방에는 대부분 5톤의 帆船으로 출어한다. 배에는 보통 해녀 12~15명이 타며, 나이는 17~30세까지가 많아서 가장 능률 높은 해녀들이었다. 그밖에 선장 1명 사공 1명, 내지 2명 승선해 6개의 노로 해녀도 함께 저으면서 식료품과 그 밖의 물건도 준비해 간다. 목적지에 도착하여 조업 중인 때는 같은 배안에서 생활하며 음료수, 식량 연료 등은 그곳에서 보충한다. 또 기선편으로 황해도 강원도 함경남북도 등지로 출어한 사람은 그곳에서 함께 집을 빈다든지 해안에 오두막을 지어 조업 중에는 거기서 간단한 생활을 하고 수익금의 대부분을 저축한다. 기선에 의한 내지(일본 본토)에 출가는 쓰시마를 제외하곤 모두가 오사카를 경유하여 출가한다(梶田一二 1995: 81).

<나>

한편, 下等(보통선실)의 운임은 大阪으로부터 섬의 상륙지가 되는 열다섯 개의 항구, 어디나 모두 6 엔인데 식사가 달려 있으니 이렇게 싼 운임은 일본 제일, 아마도 세계 제일일 것이다. 손님은 젊은이가 많아 17~18세로부터 30세 전후가 대부분이다. 개중에는 상투를 땀아 말꼬리로 잔 冠을 쓰고 턱수염을 기른 사람이나 노파도 있다. 또 사람 머리의 3배나 될 듯한 바가지(잠수들의 부이인 테왁)와 나무를 둥글게 꼬불린 테두리에 걸린 망사리(그물자루) 등을 곁에 두고 젓먹이에게 젓을 물리고 있는 사람 등 보기에 혈색이 좋고 튼튼한 몸매의 젊은 여자들도 여기 셋, 저기 다섯씩 보인다. 그들은 휴대품이나 햇볕에 그을린 혈색 좋은 튼튼한 몸으로 해서[몸 때문에] 出稼海女の 귀환자임을 알 수가 있다(梶田一二 1995: 24).

위 사례의 글들은 1930년부터 1937년까지 일곱 차례에 걸쳐 제주도를 답사하였던 일본인 마쓰다 이치지(梶田一二)의 기록을 재편집하여 발간한 제주시우당도서관(1995)의 자료에서 인용한 것이다. 인용한 <가>에서는 섬에서 나간 잠수들이 가깝게는 경상남도와 전라남도, 멀게는 황해도와 강원도, 함경남북도로 이동하였으며, 노를 저어 가거나

기선을 이용하였다고 한다. 개인 단독의 이동이 아니라 무리를 지어 간 집단성을 띠고 있었다는 점에서도 이들의 이동은 수산산업과의 연관성을 짐작케 해준다. 즉 가족 단위의 이동이 아니라 “물질”을 할 수 있는 해산물 채취노동자로서 타지로 이동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아울러 일본으로 이동할 때 잠수들은 오사카(大阪)를 하나의 거점으로 삼아 이동하고 있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오사카가 잠수들의 주요한 도일 거점이었다는 것은 이후 언급할 교통수단의 발달과도 연관성이 있다. <나>에서 기술된 내용이 바로 오사카에서 귀향하는 잠수들의 모습이다. 어로도구와 함께 찻먹이 아이까지 데린 젊은 잠수들의 모습이 마치 일상처럼 한·일 사이를 왕래하였던 정기선 안의 풍경으로 묘사되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기선을 이용하는 방법 외에도 <가>에서 보듯이 노를 저어가며 한반도의 여기저기로 이동하였다는 것도 알 수 있다. 어느 경우든 - 국내 또는 일본 지역이든, 기선을 이용하거나 무동력선으로 이동한 경우에도 - 이동하던 이들은 어떤 방식으로 타지에 나갈 수 있었던 것일까? 그들의 이동경로와 양상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2. 이동의 경로와 거점

지금 채록되어 남아 있는 일명 <해녀 노래>들은 바깥물질을 가던 잠수들의 사고와 세계관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준다(김영돈 1999, 좌혜경 2006, 이성훈 2008). <해녀 노래>를 부르는 경우는 돛배를 타고 섬 바깥을 오갈 때이거나 혹은 타지에서 배를 타고 먼 바다로 노를 저어 나갈 때이다(김영돈 1999: 393).⁷⁾ 이 점을 염두하고 아래의

7) 해녀노래는 ‘배 젓는 소리’, ‘이엿싸 소리’, ‘네(노) 젓는 소리’, ‘잠수소리’ 등으로 불리곤 한다(좌혜경 2006: 137). 제주도의 대표적인 노동요이다. 선소리를 훗소리가 따라

두 노랫말을 보도록 하자.

<해녀노래 1>⁸⁾

이여씨나	이여씨나		
성산일출	벼려두곡	/ 소완도로	가는구나
완도지방	넘어가근	/ 신기도영	넘어가곡
금당아로	넘어가근	/ 저큰바당	다지나곡
지누리대섬	넘어가근	/ 나라도로	건당흔다
나라도를	넘어가곡	/ 뽕돌바당	지나본다
돌산을	넘어가근	/ 솔치바당	건너간다
솔치바당	건너가민	/ 남해로다	노양목
사랑도바당	넘어간다	/ 물파랑것도	지나가근
제장심포	넘어가곡	/ 가닥동곳	지나가민
등바당을	넘어간다	/ 다대곳을	넘어가민
부산영도	이로구나	/ 이여씨나	이여씨나

<해녀노래 2>⁹⁾

이여씨나	이여씨나		
밋밋한	물줄에	/ 해풍만	치고요
허적소리	나는 것은	/ 연락선만	소리로구나
쳐라	쳐라베겨	/ 혼목을젓엉	남을준덜
허리지덕	배지덕말라	/ 늬의나고대	애기랑베영

서 부르는 형식을 취하는데 이때 노를 젓는 몸의 동작과 함께 박자를 맞춰서 부른다. 일정하고 반복적인 음률에도 불구하고 이 노래가 잠수들의 여러 생활상과 애환 등을 담을 수 있었던 것은 가창자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는 노랫말의 변화가 있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이로써 노동하던 여성들의 시대적 상황과 가치, 세계관을 담은 풍부한 문화적 도구가 될 수 있었다고 본다.

8) 김영돈, 1999, 『한국의 해녀』, 민속원, p. 392.

9) 좌혜경, 2006, 『해녀 노래에 나타난 노동기능과 정서』, 『제주해녀와 일본의 아미』, 민속원, pp. 144~145.

허리아지덕	배지덕말라 /	우리어명	날날적에
가시나무	몽고지에 /	손에꿍이	백이라고
날났던가	이여싸나 /	이여싸나	요벤드레
끈히지면	부산항구 /	아사이노가	없을소나
요내착이	부러지면 /	대마도산천	곶은 나무
없을소나	믈믈믈 /	신살르명	젓어보라

<해녀노래 1>에서는 성산포항을 출발한 잠수들은 완도 주변을 거쳐 경남 남해와 부산 다대포를 지나 영도로 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무동력선 돛배의 노를 저어가며 이동하던 모습이나 상상할 수도 있고, 그 배가 부산 영도를 목적지로 가고 있음도 알 수 있다. <해녀노래 2>에서는 노동애환과 더불어 이동하며 일하던 잠수들의 생활세계의 반경이 지금과 다른 양상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 흥미롭다. 부산항구와 대마도에서 노(橈)와 나무를 공급할 수 있기에 어딘들 저어서 못 가랴 하는 의지 속에서 제주-부산-대마도가 하나의 생활권으로 묘사되고 있다.

이처럼 잠수들의 이동 선상에서 부산은 중요한 지역으로 떠오르고 있었고,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부산 경남 지역을 시작으로 바깥물질이 전개되었다고 지적되어 오기도 하였다. 그렇다면 부산은 잠수들이 이동과 어떤 관련이 있었던 것인가? 김수희(2006)는 많은 수의 잠수들이 바깥물질을 가게 된 데에는 해초 우뭇가사리를 채취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우뭇가사리의 1톤 당 가격은 다른 해조류와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월등히 높(았)다. 우뭇가사리 가격이 가장 낮았던 1916년 조선인이 가장 선호하고 특별한 가치를 부여했던 미역과 비교해보면 우뭇가사리는 미역가의 66배이다. 또한 우뭇가사리 가격이 가장 좋았던(높았던) 1930년과 비교해보면 우뭇가사리는 미역가의 1,066배였다. 우뭇가사리 어장은 제주해녀에게

는 전복어장 이상으로 생계를 의지할 수 있는 곳으로, 이곳은 경상남도였다 (김수희 2006: 78).

이처럼 우뭇가사리가 조선인이 선호하던 미역보다 수요가 높았던 것은 일본의 비단산업의 발달과 공업원료로 사용되었던 사정과 연관이 깊다.¹⁰⁾ 일본으로 우뭇가사리가 수출된 것은 1877년부터 나타나며, 1893년 오사카 비단제조상들과 상인조합에서는 조선산 가사리의 품질향상을 도모하며 부산 총영사관에 문서를 보내 가사리 품질검사를 의뢰하고 있었다. 우뭇가사리는 비단의 광택을 내기 위해 바르는 원료가 되었으며, 일본산(日本産)이 쉽게 변색이 되는데 반해 조선산은 품질이 좋아 일본의 비단 제조상들이 선호하였다. 이와 같이 일본내 수요가 증가하자 일본상인들이 산지(產地) 구매와 직접 어획에 개입하게 된 것이었다 (김수희 2006: 73~74).

1915년 당시 바깥물질에 나선 잠수들은 경상남도 어장에 1,700명, 남해안 다도해 방면에 300명, 그 밖에 다른 지역이 500명으로 총 2,500명이 진출하고 있었다.¹¹⁾ 또한 이들이 생산한 해초는 부산과 목포를 통해 일본으로 수출되었는데, 1926년 당시 전체의 73%가 부산에서 거래되고 있었다(김수희 2006: 80). 잠수들은 우뭇가사리의 채취시기에 맞춰 이동하고 있었는데, 이 때 잠수들은 일본 해조상의 자금을 받은 현지 객주들로부터 사전 계약금(전도금) 받았다. 노를 저어가며 이동하는 잠수들 외에도, 기선(汽船)을 타고 이동한 후 다시 범선을 타고 20~30명이 한

10) 석화채(石花菜), 천초(天草)라고 불리는 우뭇가사리는 양갱이나 과자를 만드는 한천 재료로, 감태는 상처를 소독하는 의약품과 화약을 만드는 재료로, 가사리류는 비단에 바르는 풀이나 건축용 자재로 이용되었다(김수희 2006: 71).

11) 江口保孝, "濟州島出稼海女", 『朝鮮叢報』3호, 1915년 5월 1일(김수희, 2006, p. 79 재인용).

조가 되어 각 지로 출어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들은 동해안을 북상해가면서 일을 하고, 9월 하순에 청진에 도착하여 기선으로 귀향하였다(李善愛 2001: 35).

이처럼 반복적으로 고향과 타지를 오갔던 잠수들의 이동 패턴은 어떻게 형성될 수 있었을까? 계절에 따라 반복적으로 타지에 가서 어업활동을 한다는 것과 이동에 관련된 모집인(인솔자), 객주, 해조상인들과는 어떠한 관계 속에 있었던 것일까? 이동의 사회적 요인들을 살펴봄으로써 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3. 이동의 사회적 요인

식민지시대에 가속화된 타지 이동의 요인을 몇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도록 하겠다. 우선, 그것은 식민지 시대에 들어 일본인 어업자들의 어획이 '본격화'되었던 사회적 변화를 지적할 수 있다. 개항 이전부터 일본인들은 전라 경상도 연안 일대를 중심으로 와서 밀어(密漁) 행위를 일삼았으며, 제주도의 가파도, 우도, 비양도 등 부속도서를 근거로 삼아 연안 어장을 침탈하였다. 1883년 <재조선일본인민통상장정(在朝鮮日本人民通商章程)>에 의해 일본은 전라, 경상, 강원도, 함경도 연안에 대한 통어권(通漁權)과 함께 포획한 어개(魚介)를 매매할 수 있게 되었다(강만생 1986; 105~106). 특히 이들 지역은 이후 잠수들이 이동하게 되는 지역이기도 하여 상호 연관성을 짐작해 볼만하다. 일본인 어업자들 가운데에는 잠수들처럼 나잠업(裸潛業)을 하는 일본 미에켄(三重縣)과 오오이타켄(大分縣) 출신의 해녀(海女, Ama)들도 한반도 연안 어장으로 출어를 하고 있었다. 1903년 444명이던 해녀들은 1908년 756명까지 늘어났으나, 제주도 잠수와 비교하여 경쟁력(자맥질 기량과 임금)을 상

실함으로써 점차 감소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김수희 2006: 75~77; 진관훈 2004: 267). 즉 한반도 연안에서 활약하던 해산물 상인들에게 잠수가 일본 해녀보다 비교우위에 있었다는 것을 말한다. 일본인 어업자에 의한 제주도 연안에서의 가장 중요한 변화는 어장의 황폐화로써 그 대표적 사례는 나가사키(長崎)에서 진출한 잠수기선(潛水器船)에서 찾을 수 있다(강만생 1986; 이기욱 2003; 진관훈 2004; 부경대학교해양문화연구소 2007).

잠수기선은 1800년대 말엽 제주도의 남쪽 섬, 가파도를 무대로 삼아 활약하기 시작하였다. 가파도 외에 서귀포, 표선, 성산포, 행원 등 제주도 연안 5개소에 10여 동의 광이 지어져 이곳을 근거지로 일본인들은 매해 8월부터 다음해 3월 말까지 조업을 하였다. 4월이 되면 강원도 연안으로 옮겨가 7월까지 그곳에 머물며 조업을 하였는데 가파도에서 만 큼은 연중 조업을 하였다(이기욱 2003: 53). 일제의 식민지 지배 동안 한반도 연안의 어업은 일본 잠수기 어업이라고 할 만큼¹²⁾ 잠수들은 연안 수자원 채취에서 잠수기업자들과 경쟁관계에 있었다. 배 위에서 산소를 공급받는 잠수기 어업은¹³⁾ 나잠방식의 어로보다 더 깊이 더 많은 시간 동안 채취하여 생산량에 있어서 압도적이었다. 잠수부(潛水夫)들은 주로 남성이었으며 주로 전복과 해삼을 채취하였다. 이렇게 잡은 것

12) 어업조합을 중심으로 한 일본상인들, 특히 잠수기업자들의 조합은 한반도 연안해의 수산물을 대량으로 획득해 갔다. 일본 잠수기어업자의 진출은 “조선 연안어업 개발의 선구자” 역할을 자처하고 있었다(稻井秀左衛門 1937: 6). 이는 잠수기어업이 조선에 진출한 일본 어업의 대표적 성격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13) 잠수기어업에는 두 가지 방식이 있다. 마스크(mask)를 착용하는 것과 헬멧(helmet)을 쓰는 것으로 이는 산소를 선상으로부터 공급받는 방식의 차이이다. 일본은 잠수기어업법을 명치(明治) 초년에 영국인으로부터 배웠으며(稻井秀左衛門 1937: 130), 이를 식민지 한반도 연안에서 해산물 채취어업으로 적용하여 경제적 부를 창출하였던 것이다.

은 대개 1차 가공을 통하여 일본 국내와 중국, 홍콩으로 수출되었다(稻井秀左衛門 1937: 17~19). 잠수기어업의 전개는 한반도의 전 연안해를 구획한 가운데 이루어졌으며, 제주도에서는 동서남북에 거점을 두고 연안 어장 구역이 겹쳐지도록 경영함으로써 수자원을 대량어획 하였다(稻井秀左衛門 1937: 7, 15). 때문에 제주도 연안자원의 고갈 현상이 빚어지고 잠수들이 타지로 이동하는 한 요인이 되었다(후지나가 1999: 93; 진관훈 2004: 259). 1900년부터 1903년에 이르기까지 제주도내에서 이뤄진 잠수기어업은 18척에서 30척으로 증가하였으며, 1905년 제주도 연안에 출어하던 일본어선은 200척에 이르렀었다(석주명 1968[1949]: 172). 잠수기선의 진출은 제주도 연안에서의 막대한 수익이 알려지면서 더욱 가속화 된 부분도 있으나, 일본 현지의 어장에서 잠수기어업을 제한하였던 사정도 이들의 한반도 연해 진출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겠다. 이렇게 진출한 잠수기선들의 전복과 해삼 채취는 거의 “자원말살적”이었다(강만생 1986: 108).¹⁴⁾ 그리고 잠수기업자들에 의한 자원 남획은 경쟁 관계에 있던 잠수들의 이동을 촉진시킨 유출요인이 되었다고 하겠다. 이처럼 황폐화 해져 간 어장에서 자원 재생산을 위한 당시의 수산정책은 찾아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계속하여 자원이 있는 어장을 찾아가며 이동하였다는 점에서 ‘약탈적’이었던 식민지 수산경제의 성격을 볼 수 있다.

둘째, 제주도 연안 어장은 황폐화되었으나 수산물의 상품성은 여성들의 현금소득의 기회를 제공하였다. 자급적 식품에서 시장상품으로 변화

14) 잠수기선이 제주도 연안에 집중적으로 진출하였던 것은 제주도산 전복이 타 지역에 비해 크기와 질적으로 상등품에 속해 있었기 때문이었다(稻井秀左衛門 1937: 13). 한말부터 한일합병 이전까지 제주연안 어장에서 일어난 일본 어업의 양상에 관해서는 강만생(1986)의 논문에 자세히 기술되어 있다.

한 해산물을 통해 여성들은 가내 생활비와 재산을 마련하게 되었다. 즉 타지에서 한시적 노동을 통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은 잠수 개인에게 있어 강한 경제적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김영돈 1999: 389). 특히 일본 해조상인들의 수요가 작용하여 좋은 우뭇가사리 어장이 있었던 경상남도 지역으로의 이동이 활발하였다.¹⁵⁾

진관훈(2004)은 한 마을의 사례를 언급하며 잠수들의 어업활동에 의한 현금소득이 가계수입에서 절반에 이르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해안마을의 경제에 의해 제주도 내륙 중심의 중산간 마을에서 해안으로 경제력이 이동하고 취락이 이동하는 주요 요인으로 보고 있다. 해산물을 통해 얻은 현금수입은 제주도 경제의 초석이 되고 있다고 보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해산물의 경제적 가치 상승은 이들의 노동을 위주로 하는 해안지대의 경제활동을 활성화시켰고, 나아가 제주도내 촌락의 이동현상을 가져왔다는 것이다. 이전에는 중산간(中山間) 지대가 넓은 토지와 축력 보유를 기반으로 하여 부와 인구부양력이 가장 높았는데 교역의 발달과 해안지대로의 부의 집중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이다(진관훈 2004: 268~269). 다시 말해, 해안지역으로 경제 중심이 이동하였다는 것이며 여기에 크게 작동한 요인이 바로 잠수들의 의한 어업 경제활동이 있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는 일본으로 도일하여 벌어들인 잠수들의 소득도 포함된 것이다. 이러한 주장을 바탕으로 한다면, 식민지 시대의 수산물 상품경제는 어장의 황폐에 따른 잠수들의 타지출어를 압박하기도 하였지만 동시에 타지에서 현금소득의 기회를 만들었으며, 제주도내의 경제 중심이 내륙에서 해안으로 이전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말할 수 있다.

15) 1930년대 당시 제주에서도 우뭇가사리는 생산되고 있었지만 조선 우뭇가사리의 주산지는 울산이었다고 한다(濟州市愚堂圖書館 1995: 75).

셋째, 해상 교통수단의 발달은 이동을 더욱 촉진한 요소였다고 하겠다. 제주도를 정기항로에 편입시킨 일본은 제주도와 타 지역들 사이의 정기적인 물자와 사람의 이동을 가능케 하였다. 1912년 조선우선주식회사(朝鮮郵船株式會社)는 목포와 제주 사이에는 월 9회를, 부산과 제주 사이에는 월 5회 기선을 운항하였으며, 이밖에도 오사카항을 모항으로 하여 부산을 경유 제주도를 일주하는 항로가 월 2회 개설되었다. 이어서 오사카항을 모항으로 목포를 경유 제주를 월 3회 회항하는 항로가 개설 되었다. 이러한 해상교통의 혁신은 많은 제주인들이 일본과 육지부로 이주하는 것을 가능케 하였다(이기욱 2003: 59). 원거리로 이동하던 잠수들이 반복적으로 타지이동과 귀향을 반복할 수 있었던 데에는 이러한 정기항로의 개설도 중요한 사회적 여건으로 작용했으리라 짐작된다. 특히 1924년 개설된 제주도와 시모노세끼(下關)를 경유하여 오사카로 가는 항로는 잠수들의 일본으로의 이동을 더욱 증폭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며, 오사카가 이동의 중요 거점이 되었던 것도 이와 같은 항로에 의한 영향이라고 볼 수 있겠다.

마지막으로, 수산물 유통경제의 발달과 더불어 상인집단을 매개로 한 잠수들의 이동이 가속화 하게 되었다고 하겠다. 1910년대 타지 이동에는 잠수들의 남편 2-3인이 공동으로 어선을 매입하여 가족, 친척이 승선하여 이동하는 독립적 이동 양상도 있었으나, 주로는 객주(客主)에 의해 모집하여 이동하는 경우가 많았다.¹⁶⁾ 선주, 혹은 인솔자라는 감독자 역할을 하였던 남자들이 마을의 잠수들을 모집하였고, 이들은 객주 자신이거나 혹은 객주와 계약을 맺은 중개인이었다. 이들 모집원 겸 감

16) 바깥물질(出稼)을 가는 형태는 독립형 출가와 모집형 출가로 구분되는데, 그 비율은 4:6으로 후자가 더 많았다고 한다(江口保孝, 1915, "濟州島出稼海女", 『朝鮮叢報』, pp.166~170[李善愛, 2001, p.35 재인용]).

독자는 부산의 일본인 무역상의 신임을 받는 부하가 되어 잠수들을 모집하였다. 또 잠수와 결혼한 현지의 객주가 마을에 모집하러 들르는 경우도 중개업자였던 현지의 객주가 부산에 거주하는 일본인 해조상과 짜서 그 자금으로 해녀를 모집하러 간 경우가 있었다(李善愛 2001: 35). 이처럼 조선인 객주 뒤에는 부산을 근거지로 하는 일본인 해조 무역상이 있었었다. 따라서 잠수들의 이동은 해산물의 생산과 유통체계 상에서 부산을 근거지로 활동한 객주와 해조상인 집단과의 상호관계 속에서 이동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잠수들의 노동력을 구매한 객주들이 중개인을 통해 모집을 하고 현지로 이동시킨 후 그들의 채취물은 일본인 해조상인들에게 넘긴 것이다. 이처럼 잠수들이 부산을 향해 이동한 것은 이곳이 객주 및 해조 유통 상인들이 활약하던 중요 거점이었던 배경과도 깊은 상관성이 있다고 하겠다.

Ⅲ. 객주와 잠수의 사회관계

1. 개항장 부산의 객주

개항(1876년)은 부산항 주변의 객주들의 활동을 촉진하는 계기로 작용하였고, 이곳에서 여러 상인들이 성장 발전하였다.¹⁷⁾ 이러한 객주의 성장에는 개항초기 개항장 무역에서 일본상인의 활동범위가 조계(租界)로부터 사방 10리로 한정되어 있었던 것과 1883년 내지행상이 허용되기 전까지 각종 수출입상품의 내지유통을 개항장 객주가 맡고 있었던 사정과 관련이 깊다(김연지 2009: 241). 인천, 원산과 함께 부산의 개항

17) 부산의 객주 연구와 관련하여 이병천(1984), 홍순권(1985), 표용수(1996), 김연지(2009)의 논문을 참조하였다.

장으로 함경도, 강원도 등지의 상인이 이주하여 왔다. “일본인 중심의 부산항에서 우리 사람 상인의 사업으로서는 객주가 제일 으뜸이었고 따라서 부유층이 많았다.”는 지적으로 보아(박원표 1965: 57), 부산항 주변의 한상(韓商)과 일본 상인들의 상업 활동이 왕성하였다는 점을 짐작케 해준다.

그런데 이러한 객주의 성장은 이미 18~19세기부터 진전되어 왔다는 지적이 있다. 이 시기에 이미 객주들은 단지 상품 거래의 중개인에 그치지 않고, 자기 자본을 직접 상업자본으로 운용하며 도매상으로 발전하였으며, 객주층 내부에서도 취급상품의 전문화에 따른 물종객주(物種客主)가 출현하였다는 것이다(홍순권 1985: 89). 객주가 성장할 수 있었던 객관적 조건으로서 홍순권(1985)은 객주들이 상품을 유통시켰던 “원격지 교역”을 지적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객주는 먼 거리를 오가며 교역을 증개하는 중간상인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18세기를 지나면서 포구(浦口)의 양적 증가와 성장 및 포구의 지배권이 객주에게 있었던 것으로 미뤄 짐작할 때, “봉건적 직역(職役) 체계 하에서 특정한 국역(國役)을 담당하던 포구의 주인층이 상품 유통의 발전에 따라 직업적인 상인으로” 변모해 갔던 것이다(홍순권 1985: 85~86).

잠수들이 첫 바깥물질을 갔던 1895년 즈음, 부산 지역의 객주는 1893년에는 60개에서 1897년에 237개로 급증하였고, 이후 1909년에 이르러서는 1,367개가 있었다(김연지 2009: 71). 이렇게 급증한 요인에는 대외 무역의 창구로서 부산의 지리적 특성을 꼽을 수도 있을 것이다. 홍순권(1985)의 연구를 보면, 생산자 → 해상 → 중매 → 개항장 객주 → 거류지의 일본 상인으로 이어지는 유통구조 속에서의 객주의 위상을 보여주고 있다(홍순권 1985: 101~103). 부산의 객주들이 증가하였던 배경에는 원격지 교역을 통한 지방상인(내지상인들)과의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하고, 또한 대일무역의 지리적 입지가 작용하였다고 하겠다. 같은 개항장이었던 인천과 원산을 비교하여도 부산은 세 개항장 가운데 가장 많은 객주들이 활동하였고, 그들이 취급하던 물품들 가운데에는 해삼과 해초도 있었다(김연지 2009: 244).

그리고 19세기말 동래부(현 부산시)와 기장현(현 기장군) 사이의 상인들의 왕래가 빈번하였던 점에서 미루어 보면(김동철 2010), 부산항으로 집산되었던 물류와 이를 유통시켰던 주체로서 객주들의 활동은 보다 넓은 지역범위 안에서 그 위상을 고려해 보게 된다. 가령 “부산항의 객주는 강진객주·제주객주 혹은 인천主人·순천主人이라고 지칭되기도 하였는데, 이것은 지정객주가 이들 지역의 물산을 독점적으로 취급할 수 있는 영업권을 가지고 있었던 데 따른 것이다.”라고 하니(김연지 2009: 249), 부산지역의 객주가 활동했던 범위는 산업 분야(어업, 상업, 무역업, 해운업, 창고업, 금융업 등)와 지역은 다양한 양상으로 넓은 지역에 미쳤다고 하겠다. 이러한 부산지역의 객주들의 활동하던 상업공간으로서 부산항의 위상에 대해 표용수(1996)는 개항 이후 1895년까지 부산항의 유통 비중은 당시 외국과의 총 교역량 중 약 75%를 차지하였고, 국내항 간의 거래량 중에서도 약 30%를 차지하는 등 국제무역항으로 발전해 나갔다고 언급하고 있다(p. 262). 그러나 “조선의 대일무역은 종래의 봉건적 제한무역을 벗어나 급속도로 증가해갔고, 자유무역에 기초한 이 근대적=반식민지 무역의 발전은 종래의 전통적인 국내 상품유통체계를 재편시켜 새로이 개항장을 기점으로 하는 수출입 상품유통체계를 형성시켰던 것”이다(이병천 1984: 52). 곧 개항장을 중심으로 한 경제적 성장에 대해서는 그것과 함께 동반되었던 반식민지화의 그림자, 그리고 ‘자유’무역의 명암도 함께 고려되어야만 한다.

2. 해산물 상품을 둘러싼 사회관계

상품유통체계의 중요한 주체였던 객주는 생산자인 잠수와 어떠한 관계에 있었는가? 이제 좀 더 다른 각도에서 객주의 상업 활동을 살펴보고자 한다. 자본을 축적하고 성장하였던 객주는 선상, 행상 및 생산자와 직간접적 관계 속에 있었으며, 특히 이글에서 주목하고 있는 잠수들과의 관계에서는 직접적 이해관계 속에 위치하고 있었다. 상인과 상인사이의 관계가 아니라, 고용과 피고용의 관계 속에 위치해 있던 객주와 잠수와의 관계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그리고 이러한 관계는 식민지라는 당시의 시대적 상황 속에서 전개되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잠수들이 바깥물질을 나갈 때에는 배를 빌려 자유로이 가는 것이 아니라 객주들과 계약을 하고 나갔으며, 이때 잠수들을 인솔하였던 남성들이 이후 현지의 객주가 되기도 하였다. 1916년 부산의 (질)영도에는 제주출신 객주가 16명, 1933년에는 60명(제주출신 40명)이 있었다. 이들은 자기 자본금은 별로 없고 단지 잠수들을 모집하고 채취물을 매입하여 일본인 상인에게 판매하는 중간 거간꾼이었다.¹⁸⁾ 다음의 신문기사는 당시의 상황을 보다 구체적으로 알려 주고 있다.

<신문기사 1>

해녀가 부산 등지에 나오면 **물상객주(物商客主)**에게 의지하여 사오삭 동안을 유숙도 하고 돈도 꾸어 쓰는 터인데, 소위 물상객주라는 자들의 교활한 농락으로 말미암아 해녀들은 반년동안이나 부모와 자식을 이별하고 고향을 떠나 멀리 바다를 건너와서 고향으로 돌아갈 때에는 도로 **객주**에게 빚을 얻어 쓰고 빈속만 쥐고 돌아가게 될 비참한 운명에 있다. (중략) 소위 물상객주라는 사람들은 거의 다 **제주도 사람**이오, 해녀의 남편 노릇

18) 『朝鮮』, 218호, 1933년 7월(김수희, 2006, p.85 재인용).

하는 사람이 많으니 그들은 해녀 다섯 명만 거느리게 되면 곧 **왜채(倭債)**라도 아무 보증 없이 낼 수가 있게 된 형편이다. **일본 사람들은** 객주에게 돈을 취하여주고 물건을 헐게 가져가는 맛에 **해녀의 객주**라 하면 금송아지를 가진 사람보다 더 믿고 돈을 주게 되었다. 해녀들은 이와 같이 반 부랑자가 다 된 객주에게 돈을 얻어 쓰고 **나중 섯은 물건으로 하는 것이 예인데**, 교활한 객주와 일본 사람들은 어떠한 농락을 하였는지 실상 백근 되는 물건을 구십근만 회계하는 버릇이 있고 그 외에도 저울눈을 속여서 맨 나중에 해녀의 수입으로 되는 것은 백근에 칠십근 밖에는 못되며 이것도 객주에서 빚으로 빼앗기는 등 여러 가지로 부정한 수단 아래 전부 해녀의 수입으로 되지 못하게 된다.¹⁹⁾ (저자의 강조 표시임.)

위 기사에서는 1920년 당시, 부산으로 이동한 제주의 잠수가 왜채를 사용하였던 물상객주(=제주사람=해녀의 객주)와의 관계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었음을 보여준다. 특히 미리 “빚”(준비금=전도금)을 받고, 채취한 “물건”(해산물)로 대신하는 것은 왜채를 사용한 객주가 해산물계량에서 눈속임을 하여 중간이익을 취하는 부정수단이 쉽게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주었다. 즉 “준비금”은 잠수들의 바깥물질을 유인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해산물 계량의 부정을 통해 잠수노동력을 쉽게 착취할 수 있는 구조적 고리였다고 하겠다.²⁰⁾

다음으로, 1921년 동아일보에 게재된 기사를 통해 잠수들이 채취하

19)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박물관, 2009, 『제주해녀사료집』, p.78(동아일보, “可憐한 海女の 運命”, 1920년 4월 22일자).

20) 전국으로 진출한 제주도 잠수들이 수천 명에 달함으로써 이들에 의한 어획고가 높아지고, 각지에서 벌어진 객주들의 횡포와 금전착복 등 여러 사회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1920년 <제주도해녀어업조합>이 조직되었다. 당시 조합원은 잠수(해녀), 사공을 조합원으로 하였으며 제주도내뿐만 아니라 부산, 목포, 여수 등지에 출장소를 설치하여 이들의 어로활동을 지원하고 있었다. 그러나 1936년 12월 조선총독부의 인가를 받은 새로운 <제주도어업조합>이 도내의 모든 어업조합과 해녀어업조합을 통폐합하였다(제주시수산업협동조합 1989: 79~86).

는 해산물을 매개로 다양하게 형성되던 사회관계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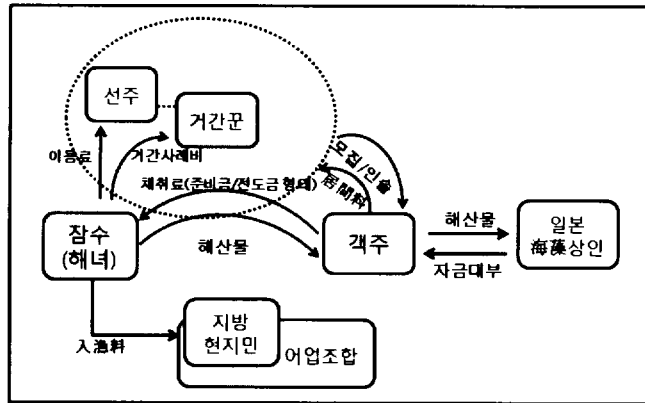
<신문 기사 2>

제주도에서는 해녀가 있어서 해마다 경상남도 울산, 장승포에 나와서 옷을 벗고 바다 속으로 들어가 해조와 전복 등을 따는 사람이 4천 명 이상 이라. 이리므로 이 해녀문제는 제주도의 중대한 문제요 그들이 버는 금액이 수백만 원에 달하는데 ㉠ 울산 장승포 등지에 있는 지방 인민은 남의 지방에 와서 이와 같이 무수한 수산품을 가져가서는 안 되겠다 하여, 해녀와 그 지방 인민 사이에 서로 분쟁이 있음으로 당국이 조정하여 해녀는 그 지방 인민에게 入漁料라는 것을 바치고 이것만은 무사히 해결되었으나 그 후로 해녀들은 그들의 특별한 재주를 발휘하여 채집한 해조는 그때부터 임시 점포를 실시한 客主에게 팔게 되었다. 그러나 이 객주라는 것이 무지 몽매한 해녀들을 속여 서로 매매 할 때는 혹은 근 수로 속이고 가격으로 속여서 그들의 6~7삭 동안 뜨거운 별 아래 찬물 속에서 얻은 이익은 전부 간악한 객주에게 빼앗기게 된다. 또 이 객주라는 자는 해녀의 남편되는 자를 이용하여 ㉡ 해녀가 나와서 벌이하는 동안 그 집안 생활비와 또는 준비금으로 미리 돈을 꾸어 주어서(이를 전도금이라고 한다-저자) 해녀의 몸은 전부 객주라는 자에게 매여 살게 하고 싶든 좋든지 그들이 얻은 바 수확물은 그 돈을 취해준 객주에게 팔게 된다. 그런데 이 객주들은 어디서 돈을 번통하여 해녀에게 꾸어주느냐 하면 ㉢ 부산에서 海藻業을 하는 일본사람에게 빚을 얻어서 주고 나중에 해조를 해녀에게 싸게 사서 중간이익을 먹는 것이요, 또 해녀가 타고 다니는 어선에는 소위 거간꾼이라는 것이 있어서 객주와 해녀 사이에 居間料를 따 먹음으로써 결국 해녀가 일년 동안 일하여 얻은 바 소득은 이와 같이 중간에서 악한 무리의 배를 채우고 그들은 섭섭히 빈 주먹으로 돌아가게 됨으로 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제주도 인사들이 수산조합을 일으키고(생략).²¹⁾ (저자의 강조 표시임.)

21)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박물관, 앞의 책, p.87(동아일보, “海女問題解決乎: 당국자의

위 기사는 1920년대 초반 경상남도 일원에 나가 있던 잠수들의 상황을 보여주는 예가 된다. 먼저, 잠수들과 관련된 사회관계를 살펴보면, 현지 주민과 객주, 그리고 객주와 잠수 사이에 있던 거간꾼이 등장한다. 그리고 이 기사 속에 등장하지는 않지만 잠수들이 배를 이용하는 경우 선주와의 관계가 추가된다. 이들의 관계를 도식화 하면 아래의 <그림 2>과 같다.

<그림 2> 잠수의 해산물을 둘러싼 사회관계



<그림 2>에서 주목하게 되는 점은 해산물이 흘러가는 방향과 다양한 돈의 흐름이다. 해산물은 채취자인 잠수에게 객주를 거쳐 일본 해조상인에게로 들어가는 반면, 그 역방향으로 객주를 거쳐 채취료가 지급된다. 그러나 실상 잠수들은 온전히 그 가격을 받는 것이 아니다. 선주에게 배 값을 내야하고, 지역의 어업조합 및 마을주민에게 입어료를 내야하며, 자신들을 객주와 연결시켜 준 거간꾼에게도 사례비를 낸다. 따

주선으로 거간을 없이하고 직접 판매하기로”, 1921년 3월 19일자).

라서 실상 잠수의 몫으로 돌아오는 실질 금액은 훨씬 줄어들 수밖에 없다. 즉 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해산물과 달리 돈의 흐름은 분산적이므로 결국 생산자에게 돌아가는 몫이 작아지는 것은 당연하다. 게다가 해산물의 흐름과 돈의 흐름이 모두 거쳐 가는 길목에 객주가 위치하고 있다.

좀 더 세부적으로 제 관계를 살펴보면, 잠수들은 ‘남의 지방에 가서 수산물을 가져가는 것’으로 말미암아 현지주민들과 갈등관계 속에 있다(앞 기사 속의 ㉒항). 그 결과 현지의 어장을 이용하는 대가로서 입여료를 지불하고 있는 것이라 하겠다. 다음으로, 잠수들은 객주로부터 ‘준비금’을 사전에 받고 타지로 이동한다는 점으로 말미암아 잠수가 객주에게 종속되는 결과를 빚고 있었다는 점이다(㉔항). 이것은 타지로 이동하던 잠수들에게서 나타났던 보편적 양상이었다(김영돈 1999).

이러한 계약관계의 이면에는 객주에게 자금을 지불하던 일본 해조상인이 있었기에, 객주는 중간에서 해산물의 시세 차익을 얻을 뿐만 아니라 준비금이라는 사전계약 방식을 통해 잠수들을 구속력을 가질 수 있는 지배적 위치에 있었다. 또한 위 그림 상에서는 선주와 거간꾼을 별개로 분리하였지만, 이 둘의 존재는 같은 사람일 수도 있었고, 선주가 객주일 수도 있는 다양한 사례들이 있음은 잘 알려진 바이다. 잠수들이 한반도로 이동하기까지의 과정에는 잠수들을 “모집”하고 배로 이동시키며, 해산물을 사 줄 사람이 필요한 것이며 이들 각각의 역할에 대한 지불이 뒤따랐기에 결국 분배의 몫에서 잠수들은 언제나 불리하였다.

이와 같이 잠수와 객주의 관계는 기본적으로 갈등을 내포하고 있었다 하겠으며, 이는 식민지 수산경제 체제에서 형성되었던 관계라는 점에서 보다 넓은 견지에서 바라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박구병(1967)은 19세기 후반부터의 한·일어업사를 고찰함으로써 그 속에서 나타난 양국간의 어업은 단지 어로행위가 아니라 외교·군사적 성격의 문제였음을 지

적하였다. 일본이 한국에 대한 정치적 지배력의 증대와 같이 하여 일본이 어업방면에 있어서 거둔 외교적 성과 안에는 일본 어민에 의한 한반도 연안의 어장 침탈과 황폐화가 동시에 심화되었던 것이다(박구병 1967: 53). 따라서 잠수와 객주의 갈등관계도 이러한 약탈적 식민지 수산경제체제라는 구조적 고리 안에 이해 할 수 있을 것이다.

IV. 해방 후의 분쟁과 정착

해방이후에도 잠수들의 이동은 계속되었다. 그러나 이전과 달라진 점이 있었다. 이들의 이동은 일본을 포함 해외지역이 아닌 한반도 이남의 국내 이동으로 국한되며, 공식·비공식의 이동으로 분류화 되는 양상이 나타나고, 이들의 이동을 둘러싼 지역 간 갈등이 격화되었던 것이다. 잠수들의 '이동'은 곧 타지 출어(出漁)는 다른 현지의 마을어장에서의 입어(入漁)를 말하는 것이었다. 분쟁과정을 거치며 현지에 정착하는 잠수들이 나타났고 반복적 이동 패턴의 양상은 약화되었다. 이동에 따른 분쟁을 잠수라는 한 개인, 그리고 제주도라는 특정 지역의 어로집단에 한정된 사건으로서가 아니라, 식민시대로부터 산업화를 거쳐 온 한국의 사회변동 과정 속에서 살펴봄으로써 이들의 이동이 갖는 - 그리고 결국 정착으로 이어지는 - 사회적 성격에 대해 생각해보고자 한다.

1. 이동에서 정착으로

한 때 4천명 이상 바깥물질을 가던 잠수들의 수는 해방 후 점차 들어들었고 1970년대 중반에 이르러 더 이상의 '공식적' 이동은 나타나지 않

는다. 그 이유는 이후 기술할 분쟁과 관련이 깊다. 그러나 넓게 본다면 한국의 수산업법이 점차 정비되면서 이들의 정주화(定住化)에 영향을 미쳤던 것이라 본다.

<표 2> 1960~1970년대 타지로 이동한 잠수의 추이 (단위: 명)

구분	계	경남	경북	전남	강원	기타
1962	4,090	1,356	1,584(1,070)	232	787	131
1963	2,215	696	1,320(1,120)	71	125	3
1964	2,071	378	1,354(1,223)	108	165	66
1965	1,538	258	1,049(976)	56	113	62
1966	1,903	338	1,103(1,021)	143	188	131
1967	1,909	788	635(608)	248	129	109
1968	1,093	159	654(619)	84	81	115
1969	1,167	457	216(208)	282	145	67
1970	1,023	239	85	188	-	511
1971	1,230	302	126	284	166	352
1972	917	264	249	158	104	142
1973	867	254	199	238	64	112

* 제주특별자치도, 2006, 『제주수산60년사』, p.271. ()안은 경북재정지구

<표 2>에서 보듯이, 1962년 타지로 가던 잠수들은 4천명이 넘었으나 1963년 그 수는 약 반으로 급감하였고, 이후 계속 줄어들다가 다시한번 1968년 크게 감소하였다. 그리고 1974년 이후 타지로 가던 잠수들은 거의 없었던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제주특별자치도 2006: 271). 따라서 1962년~1963년 사이와 1967년~1968년 사이, 그리고 1974년 이후가 중요한 변화의 시점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변동을 필자는 한국 수산업법의 제도적 정비와 관련하여 생각해보고자 한다. 잠수들이 이동하는 곳은 구체적으로 타지의 연안 마을어장이다. 이곳에서 어로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명시화한 것이 한국 수산업법이며, 위 표에서와 같은 불규칙한 변동이 의미하는 것은 곧 수산업법의 제도적 정비과정이 잠수 개인의 어로행위에 적지 않은 혼란을 야기하였을 것이라는 점이다.

1962년 어촌계가 공식적 어업주체로서의 위상을 가지게 되면서 연안 어장의 주체로서 현지 지역 주민의 위상이 높아졌다. 마을에 정주하며 살아가는 주민을 어장 이용의 주체로 합법화 하게 된 것이다. 1973년에 이르러서는 각 마을 간의 어장 구획도 문서화 되었다(제주시수산업협동조합 1989: 212~213). 이러한 제도적 변화는 누가 마을어장에서 어로할 수 있는가라는 것도 명확히 인식시켜준다. 특히 타지 출신의 어로자가 더 이상 거주지(엄밀히 하면 정주지)가 아닌 곳에서 합법적 어업권자가 될 수 없다는 한 판례의 영향도 컸던 것으로 보인다. 그 판례란 1967년 2월, 경상북도 일부 지역의 어업조합장의 대구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 하였는데, 이에 따라 1968년 9월 제주 잠수들이 경북 일부지역의 마을어장에서 더 이상 입어할 수 없다는 '입어관행권의 소멸'을 인정한 판결을 말한다(제주특별자치도 2006: 274). 따라서 잠수들의 이동이 감소한 데에는 그동안 관행적으로 인정되어 온 타 지역에서의 입어권이 더 이상 합법성을 가질 수 없었던 데에 따른 영향이 컸으며, 이에 따라 다른 지역의 어장으로 이동하던 잠수들은 자신의 고향 또는 현지의 마을 어느 한 쪽을 선택하여 정주하게 된 것이라 하겠다. 기본적으로 더 이상의 반복적 이동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 가운데에는 정주자에게 권리를 부여한 한국 수산업법의 정비에 따른 영향이 컸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 어장 이용의 합법적 주체

현재 잠수들의 어로는 수산법상 마을어업에 속하는데 이것은 마을이

위치하고 있는 앞 바다에 대한 어로권을 규정한다. '마을'어업이라는 용어가 암시하듯이 이 어업은 이전의 제1종 공동어업을 지칭하는 것으로, 마을의 앞바다에서 자라는 해초와 패류를 채취하는 권리를 그 마을사람들에게 부여하는 원칙성을 담고 있다. 마을의 앞 바다가 어떠한 과정을 거쳐 연안 주민들에게 법적 권리가 주어졌는지를 간략히 언급하도록 하겠다. 이를 바탕으로 하여 이후 지역 간 발생한 분쟁의 양상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조선시대에는 어장의 소유가 원칙적으로 국유(國有)였으나 조선 후기부터 어업제도가 문란해져 대부분의 어업은 왕족 및 사대부 등에 사점(私占)이 되어 왔다. 어업적 가치가 적고 생산관리가 어려운 해조의 채취나 조개류의 잡이는 어촌 서민들의 자유어업으로 시작되었으나, 이에도 경쟁이 나타나고 다수가 협동으로 조업할 수밖에 없는 어업은 마을에서 공동으로 조업하고 관리하는 형태였다(제주특별자치도 2006: 229).

마을 앞 바다의 어로가 공식적 법률의 지배를 받는 '제도적' 공간으로 들어온 것은 1908년 어업법의 제정되면서이다. 이후 식민지 시대의 어업령(1911), 조선어업령(1929년)이 제정되었고, 해방 후 수산업법(1953년)으로 그 맥이 이어져 왔다. 1908년 어업법은 일본의 어업법을 모방한 우리나라 최초의 어업법이었으나, 1911년 이 어업법을 폐지하고 어업령을 제정하는데, 이때 "수면을 전용하여 어업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전용어업(專用漁業)" 면허제도가 제정·시행되었다. 또한 어업조합을 설립토록 하여 그 지역 조합에 전용어업면허를 주고 당해 지역 어민들로 하여금 행사케 하였다(제주특별자치도 2006: 229~230).

해방 후 혼란기와 6.25전쟁을 거치는 동안 각종 제도의 마련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수산업 분야에도 1929년 제정된 <조선어업령>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다가 1953년 9월에 이르러 “수산업법”이 탄생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일본의 어업법을 거의 모방하는 것이었고, 이후 20여 차례나 개정을 거쳐 ‘마을어업’과 관련한 내용들이 주요 개정하기에 이른다. 마을어업과 관련하여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1975년 12월에 어촌계가 마을어업에서 우선적 ‘면허권자’가 되었으며, “제1종 공동어업”을 “공동어업”(1990년 8월), 이후 다시 “마을어업”(1995년 12월)으로 명칭을 바꾼 것 등이다(제주특별자치도 2006: 230~231).²²⁾

이처럼 마을 앞바다에 대한 지역주민의 우선권은 해방 전에는 지역의 어업 ‘조합’에 있었다면 해방 후에는 ‘어촌계(漁村契)’에 주어졌다. 어촌계는 마을에 거주하는 ‘주민’들에 운영되는 자율공동체라는 점에서 전국적 조직망을 가지고 중앙 집중형의 조합과는 다르다. 그러나 어촌계가 마을어장에 대한 공식적 권한을 행사할 수 있었던 것도 해방 후 한참이 지나서였으며, 여기에 더해 정착한 잠수가 정식 어촌계원이 되는 데에는 더 많은 시간이 요구되었다.

부산시의 용호어촌계의 사례를 보면, 지구별 수협의 소유였던 공동어장(마을어장)을 1978년부터 해당 어촌계로 이관하게 되었으나 부산시 수협은 이를 이행하지 못하고 계속 소유주체로서 잠수들의 입어증을 발급해주며 어장이용에 관여하고 있었다. 점차 생산이 저조해지면서 수협은 어촌계로 입어증 발급의 권한을 넘겼고, 용호어촌계가 잠수들에게 입어증을 발급하기 시작한 것이 1985년의 일이었다. 잠수들은 부산시수협의 조합원으로 가입하였으나 마을어촌계의 기존 회원들의 반발이 잇달았다. 결국 어촌계원이 되는 데에 30년 이상이 걸렸고, 그동안 잠수들

22) 마을어업의 정의를 “일정한 수심이내의 수면을 구획하여 폐류·해조류 또는 수산청장이 정하는 정착성 수산동물을 관리·조성하며 포획·채취하는 어업”으로 개정하였다.

은 그 지역의 관행어업자로만 간주되었을 뿐이었다(최성애 78~79).

결국, 현지에 정착한 잠수들이 현지의 어업권자가 되는 데에는 국가의 수산법이 인정하는 조합원으로서만이 아니라, 지역주민이 부여하는 어로권(어촌계원)을 취득함으로써 '온전한' 어로권자가 될 수 있었다. 연안 어장에서의 어로권은 국가의 수산조합 조직보다는 지역단체의 동의와 수용이 현지 어업활동에서 실질적인 중요성을 가진다는 것을 보여준다.

3. 분쟁의 씨앗: 식민지 유산 '자유'입어

이동하였던 여러 지역들 가운데에서도 경상북도의 재정(裁定)지구는 해방 후 잠수들의 이동을 둘러싸고 지역 간 마찰이 발생하였던 대표적인 곳이다. 경북재정지구란, 1956년 상공부장관이 제주도 잠수 1,070명에 대한 입어의 관행을 인정한 경상북도 5개 어협(구룡포, 대보, 감포, 양남, 양포) 지역을 말한다. 이에 이어서, 1960년 경상남도 정자어협 공동어장 내에서도 입어 관행권 재정(裁定)을 인정하게 됨에 따라 경상남북도에 총 1,270명의 잠수들이 이동하며 '합법적'인 어로를 행할 수 있었던 것이다(제주특별자치도 2006: 272).

분쟁의 이유는 어장에서 생산되는 해산물이 경제적 이익이 높아 지역 간 이해관계가 발생하였던 데 따른 사정도 있지만,²³⁾ 이를 소득화 할 수 있는 주체가 현지의 주민인가 아니면 제주도 잠수들인가라는 문제로 모아졌다. 특히 제주 지역사회에서는 이 문제가 큰 사회적 현안문제로 다루어졌는데, 그 까닭은 제주도 전체 수출액 중 수산물이 70% 이상, 제주도 수산물 수출액 중 50~70%가 잠수들의 마을어업에서 생산되는

23)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박물관, 앞의 책, pp.165~167(제주신보, "경북 해녀문제의 현황", 1957년 8월 28일자).

등 잠수들의 노동력은 지역경제에 큰 역할을 하였기 때문이라고 고려된다. 잠수 1인당 소득 면에서는 타지로 나간 잠수가 도내의 잠수의 소득보다 평균 6배 이상을 더 벌었다(제주특별자치도 2006: 268). 때문에 경제적 이익을 포기할 수 없는 현지의 지역 어업조합과 제주도 잠수들의 입어는 상호경쟁 관계에 있었던 것이다. 제주 잠수의 입어 문제는 제주도와 타지역 간의 지역 차원의 문제가 된 것이며, 이를 보여주는 것이 이 갈등관계가 두 지역의 행정가 및 주무부서(당시로서는 海務당국)들이 모여 협상을 통해 합의를 모아갔던 과정에서도 알 수 있다. 그 합의란 이전에 입어했던 “실적”이 있는 잠수들만 입어가능토록 하자는 것이었다. 이에 제주도에서는 어업조합이 발행하는 “출가증(出稼證)”을 받아 타지로 나가도록 “계획출가”를 시도하였다. 잠수입장에서는 출가증을 받기 위해 어업조합에 회비를 내어 ‘공식적’으로 이동하는 방법 외에도, 또 다른 방식으로 육지에 나갈 수도 있었다. 현지로부터 “밀파된 인솔자들이 입도(入島)”하여 잠수와 직접 계약을 맺어 ‘자유로이’ 이동하였다.²⁴⁾ 이처럼 1960년대 초반 한정된 계획출가의 시도는 “암인솔자를 따라 밀출가”하는(제주특별자치도 2006: 273) 비공식적 이동으로 인해 큰 효과를 거두지는 못하였다.

경상남도 지역에서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1958년 8월 5일자 제주신보의 보도에 따르면, “방어진을 포함 울산군 내에는 본도(제주도)에서 500~600명 해녀가 매년 출가하여 천초와 미역 그 밖에 패류 등을 채취”하고 있었으며, 입어료와 판매권 문제에 대한 진정이 있었던 가운데, 방어진에서는 1920년대 “입어료 (인하)문제와 자유입어권²⁵⁾ 주장

24) 그러나 암인솔자와 밀출가 밀출가의 경우 잠수들은 수입의 8할을 손실보고 있었다고 하니 실질적으로 이득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제주특별자치도 2006: 273).

25) 입어란 공동어업의 어장 내에서 종래의 관행에 의하여 그 어업을 행할 수 있는 사실

하는 잠수들의 유허소동이 벌어졌었다.”²⁶⁾ 분쟁을 격화 시킨 요인은 출어지의 현지 주민들이 마을어장을 매매하여 잠수들이 채취할 수 있는 해산물이 없게 된 데에 있었다.

이러한 분쟁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분쟁의 핵심은 어디에 있는 것인가? 연구자는 그것이 마을 앞의 어장/바다는 누구의 것인가라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고 본다. 제주도 잠수들은 식민지 시대부터 바깥물질을 하며 현지의 어장을 이용해 온 “실적”이 있어 이들에 대한 “관행적 입어권”이 부여되었으나(수산업법 40조 1항),²⁷⁾ 현지의 어장은 “특정인에게 공매(公賣)하여 이익을 주며 어업조합은 행사료만을 징수하고 해녀(잠수)들에게는 염가로 지불”하고 있었다.²⁸⁾ 즉 현지 주민들은 ‘자신들’의 어장을 매매함으로써 이익을 취하려 하였고, 잠수들은 이전(식민지시대)에도 입어하였던 어장의 해산물에 대해 자신들에게 채취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었다. 전자의 주장은 연안의 해산물을 협동 노동으로 채취하여 온 어촌의 공동어로 전통과 주민들에게 어

을 말한다(강대원 2001: 211). 해방 후 제주와 경북재정지구 간의 분쟁과정에서 타지 어장에서 입어할 경우 공공기관의 허가를 얻은 후 입어권을 가질 수 있었는데, 그 외의 방법의 것을 자유입어 행위로 보고 있다(1956년 4월 17일자 제주신보 참조). 즉 자유입어란 해방 후 공식적 절차를 밟지 않은 비공식적 입어행위를 말하는 것이지만, 이러한 자유입어의 권리를 주장하게 된 배경은 사실 식민지 시대 총독부의 인가를 받은 경상도의 몇몇 어업조합에 출어하던 관행이 있었기 때문이다. 해방 후 과거의 그 권리를 인정해달라는 것이 출어한 잠수들의 주장이었다. 이러한 의미에서 자유입어권이란 비공식적 입어의 공식화를 주장하는 것이라 하겠으며, 그 근거는 식민지 시대의 입어권리에 두고 있다.

26)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박물관, 앞의 책, pp.172~173(제주신보, “해녀 괴롭히는 어조 수백 명 출가한 울산의 실태”, 1958년 8월 5일자).

27) 수산업법(1953년 9월9일) 제 40조(입어의 관행)는 “공동어업의 어업권자는 종래의 관행에 의하여 그 어장에서 입어를 거절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였다.

28)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박물관, 앞의 책, p.167(제주신보, “경북 해녀문제의 현황”, 1957년 8월 28일자).

장이 전용(專用)되어 온 법률적 합법성에 바탕을 두고 있다. 그러나 후자의 경우는 식민지시대로부터 이어져 온 “관행”에 기초하여 “자유입어권”이 있음을 주장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일제시기 총독부는 경상남도 지역의 6개 어업조합(강동, 대현, 온산, 서생, 동면, 기장)을 설립하도록 하고 ‘해녀’(잠수)에게 입어를 인정해주었었기 때문이다.

결국 이 양자의 주장 안에서 맞서고 있는 문제의 핵심은 식민지시대의 권리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에 있으며, 여기에서 관행과 이동의 자유가 주장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잠수들의 자유입어는 식민지체제 하에서 만들어진 ‘임시적’이고 한시적인 어로권이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법적으로 마을어장의 전용권이 지역주민에게 있었음에도 지역 경계를 넘어 잠수들에게 채취권이 허용된 것은 해당 지역의 객주에게 고용된 형태였기에 가능하였던 것으로, 실질적으로 잠수들이 지역민으로 현지의 조합원으로서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던 것이다. 다시 말해, 마을주민들의 어장에 타지 출신의 잠수가 입어 가능하였던 것은, 해조(海藻)에 대한 일본의 산업적 수요(비단산업 및 군수산업)와 식민지 총독부가 타 지역의 입어를 인정함으로써 전개된 것이다(김수희 2006). 그리고 경계를 넘음에 따른 갈등은 두 지역 간의 이권 분쟁양상으로 나타났던 것이다.

이처럼 해방 전후의 이동은 서로 다른 사회적 환경에서 도출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라 생각한다. 식민지 시대 자유롭게 타지로의 지역적 경계를 넘을 수 있었던 것은 잠수들이 식민지 수산경제의 하부단위로서 고용되어 이루어졌던 것이다. 잠수들의 이동은 암묵적으로 어업조합(당시는 일본인 島司)의 묵인 하에 이루어졌으며 식민지 수산경제가 배태시킨 특수한 양상이었다고 말 할 수 있다. 그러한 이동이 ‘해방 이후에 와서’ 사회적 쟁점이 되었다는 것도 잠수들의 바깥물질을 시대적 맥락

에서 분석해 볼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V. 맺음말

식민지시대부터 제주도 여성들이 무리를 지어 섬 밖의 여러 지역으로 나가 어업활동을 전개하였던 것은 진취적이며 억척스런 삶의 개척을 보여주는 많은 미담들로 남아 있다. 이 글은 이러한 여성들의 이동을 사회적 변동 속에서 그 이동의 성격을 조명해보고자 하였다. 이동이 식민지 시대에 집단적 양상을 띠며 촉발되었다는 점과 특히 잠수들의 이동에 있어서 부산이 거점이 되고 있었던 점, 그리고 해방 후 현지에서 일어난 분쟁에 초점을 두어 살펴보았다.

잠수들의 이동은 식민지 시대에 촉발되고 가속화된 것으로 이는 식민지 수산물 상품경제 하에서 이루어진 체계적 이동이었다. 개항 이후 부산을 거점으로 형성되어 온 객주들은 해산물이 수요를 가진 일본 해조상인들의 자금을 대부받고 제주도의 잠수들을 모집하여 여러 지역의 어장으로 이동시킬 수 있었다. 일본의 군수산업 및 산업발전에 따른 해초의 수요가 유통 상인 집단으로서 객주를 매개로 하여 채취자 잠수들의 이동을 촉진시켰던 것이다. 즉 해산물을 둘러싼 제 관계에 있어서 잠수들은 채취자(생산자)로서 가장 하부단위에 위치하고 있었으며, 차별적 분배의 구조적 고리 안에 놓여 있었다.

활발하였던 잠수들의 타지 이동은 수산 상품(자원)을 쫓아 자원 획득을 도모하였던 식민지 수산경제체제 하에서 이루어진 '자유입어' 활동이었다. 즉 지역주민의 자원권보다 자원의 상품적 필요성이 타지 이동의 자유를 암묵적으로 용인한 식민지수산경제 속에서 전개된 것이다.

따라서 잠수들이 가지고 있었던 타지의 입어권은 식민지 시대에 경계를 넘나들 수 있었던 '자유'에 따른 것이었으며 이것이 후에 지역 간 분쟁의 씨앗이 되었던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자유 입어권'안에 스며있는 것은 식민지체제와 밀착하여 양산된 자원에 대한 약탈성을 보여준다. 경계를 넘어갈 수 있었던 '자유'란 자원에 대한 상품적 수요와 식민지 모국 산업 발전의 필요성에 의해 작동된 것이다. 여기에 생산자에 대한 분배와 수산자원의 관리 및 수산물 시장가격의 안정, 어장에 대한 전통적 운영방식과 같은 제 부분의 종합적 고려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다. 즉 일정 영역성에 대한 주(인)권을 인정하지 않는 무한 경쟁적인 흡수적 자유를 전개시킨 것이라 본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제주 잠수들은 현금소득의 '기쁨'을 누릴 수 있었으나 그것은 기본적으로 식민지 경제의 착취적 고리를 안에서 용인되었던 것이었다. 이를 입증하는 것이 임금분배에서 언제나 그들은 불리한 위치에 있었다는 사실이며, 이 문제 역시 해방 이후에 터진 분쟁에서 이들의 '권익'과 '인권'을 주장하는 배경이 되었던 것이라 본다.

이와 같이, 다른 지역으로 경계를 넘어가며 이동을 반복할 수 있었던 제주 잠수의 이동은 개인과 한 지방출신 여성들의 이동인 것만이 아니라, 일본의 식민지 수산경제체제하에서 수산자원의 획득을 위해 용인된 이동이다. 자원(상품)이 있는 곳을 따라가며 남획하였던 식민지 수산경제가 허용하였던 경계 넘나들기는 부산의 객주와 잠수, 잠수와 현지 주민 사이의 갈등관계 속에서 전개된 것이었다. 해산물이 생산에서 소비까지 흘러간 흐름을 따라가 보면 그 종착은 일본 산업의 발달로 이어졌으나, 반면 그 역방향으로 간 돈의 흐름에는 다양한 매개자들이 개입된 끝에 잠수에게 이르는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일본 산업체와 제주 잠수는 상호 양 극점에 위치하며, 이 사이를 오가던 흐름은 해방 후 변화

하였다. 어장의 주인으로서 현지 주민들과 이를 채취할 수 있는 잠수들은 상호 경쟁관계로 변화하였고, 거주자에게 부여하는 합법적 어로권은 이동보다 정주화에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본다. 관행적으로 이어져 왔던 타지의 입어권은 소멸되기에 이르렀으며 이동보다는 어느 한곳의 정착을 선택하게 된 것이다. 이동 후 현지에 정착한 정주 잠수들의 또 다른 문화가 여러 지역과 도시 안에서도 형성되고 있다. 이들의 현지 정착 과정과 또 귀향한 잠수들과의 관계 등 이 논문에서 다루지 못한 여러 미흡한 점들은 현지 정착 잠수들의 생활사에 대한 연구자의 다음 과제 안에서 다뤄보고자 한다.

참고문헌

1. 논문 및 저서

- 강대원, 『濟州潛嫂權益鬭爭史』, 제주문화, 2001.
- 강만생, 『韓末 日本의 濟州어업 침탈과 島民의 대응』, 『濟州島研究』3, 1986.
- 김동철, 『18세기 후반~20세기 전반 기장지역의 시장권』, 『지방사와 지방문화』 13(1), 2010.
- 김수희, 『日帝時代 濟州 海女の 海藻類 採取와 入漁』, 『濟州海女: 抗日運動, 文化遺産, 海洋文明』(제주해녀박물관 개관 기념 국제학술회의 자료집, 2006. 6.7~8.), 제주해녀항일운동기념사업위원회, 2006.
- 김연지, 『19세기 말·20세기 초 부산지역 객주 영업과 자본 축적 유형』, 『역사와 경계』71, 2009.
- 김영·양장자, 『바다를 건너 조선의 해녀들』, 정광중·좌혜경 역, 각, 2004(1988).
- 김영돈, 『한국의 해녀』, 민속원, 1999.
- 박구병, 『韓·日近代漁業關契研究: 1876년~1910년』, 『釜山水大研報』7(1), 1967.
- 박원표, 『釜山の 古今』, 현대출판사, 1965.
- 부경대학교 해양문화연구소, 『조선전기 해양개척과 대마도』, 국학자료원, 2007.
- 석주명, 『濟州島隨筆』, 寶晉齋, 1968(1949).
- 양원홍, 『완도에 정착한 제주해녀의 생애사』, 제주대학교석사학위논문, 1999.
- 오선화, 『죽변 지역 이주 잠녀의 사회·경제적 연망과 연대 양상』, 『한국민속학보』 9, 1998.
- 이기욱, 『제주 농촌경제의 변화』, 집문당, 2003.
- 이병천, 『居留地貿易機構와 開港場客主』, 『경제사학』7, 1984.
- 이성훈, 『<해녀노젓는소리>의 형성과 본토 전파』, 『우리文學研究』24, 2008.
- 제주도·제주도여성특별위원회, 『구술로 만나는 제주여성의 삶 그리고 역사』, 파피루스, 2004.
- 제주시수산업협동조합, 『濟州市水協史』, 경신인쇄사, 1989.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수산60년사(1946~2006)』, 파피루스, 2006.
-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박물관, 『濟州海女史料集』, 경신인쇄사, 2009.

- 조성운, 「조선시대 제주도 인구의 변화 추이」, 『탐라문화』26, 2005.
- 좌혜경, 「해녀 노래에 나타난 노동기능과 정서」, 『제주해녀와 일본의 아마』, 민속원, 2006.
- 좌혜경 외 9인, 『제주해녀와 일본의 아마』, 민속원, 2006.
- 진관훈, 「근대제주의 경제변동」, 각, 2004.
- 최성애, 「해녀의 이주생활사: 부산 용호어촌계 해녀에 관한 사례연구」, 『水産業史研究』2, 1995.
- 표용수, 「開港期 釜山港을 中心으로 한 客主商人의 商業活動」, 『경주사학』15, 경주사학회, 1996.
- 한상복·이문웅·김광억, 『문화인류학개론』, 서울대학교출판부, 2009[1985].
- 홍순권, 1985, 「開港期 客主의 流通支配에 관한 研究」, 『한국학보』11(2), 일지사(한국학보), pp.83~117.
- 후지나가 다케시(藤永 壯), 「1932년 濟州島 海女の 鬪爭」, 『濟州島'의 옛 記錄: 1878년~1940년』, 제주시우당도서관 편, 경신인쇄사, 1999.
- 榊田一二, 「濟州島の 地理的 研究: 1930年代의 地理·人口·産業·出稼 狀況等」, 濟州市愚堂圖書館, 1995.
- 稻井秀左衛門, 『朝鮮潛水器漁業沿革史』, 近澤商店印刷部, 1937.
- 李善愛, 『海を越える濟州道の海女』, 明石書店, 2001.

2. 신문 자료

- 동아일보, “可憐한 海女の 運命”, 1920년 4월 22일자.
- 동아일보, “海女問題解決乎”, 1921년 3월 19일자.
- 제주신보, “경북 해녀문제의 현황”, 1957년 8월 28일자.
- 제주신보, “해녀 괴롭히는 어조(어업조합)”, 1958년 8월 5일자.

AbstractSocial History of Settlement in Busan of *Jamsu*(Women-divers) from Jeju around 1945: Movements and Conflicts across Local Borders

An, Mi-Jeong*

Women of Jeju island had moved periodically getting off island in groups to scrap together some money by collecting seafood and coming back to home from the colonial era to 1970's. This article aims to illuminate the characteristic of these women's movements in context of the social changes. To this purpose, it points to the facts that the movements had been provoked in the form of collective behavior since the colonial era and *Jamsu*(women-divers) made Busan as a foothold in the course of the movements, and the conflicts occurred in Busan after 1945. *Jamsu'* movements were organized ones under the colonial commodity monetary economy of seafood which had been set off and accelerated in the colonial era. *Gaeck-ju*(mediate merchant) who flourished in Busan after the opening of port would recruit *Jamsu* of Jeju island and send to other fishing grounds borrowing the money of Japanese seafood traders. In other words, The growing demands of seafood owing to the development of Japanese military and other industries provoked the movements of *Jamsu* who collected seafood under the sea through the intermediary of *Gaeck-ju*, the circulation merchant group. Therefore, *Jamsu* as the collectors of seafood located

* Research Professor, Institute of International Maritime Affairs,
Korea Maritime University

in the lowest place at the relationship formed around the seafood and linked systemically to the network of the discriminative distribution. *Jamsu*' active movements to other places were the fishing activities carrying out without licenses of authorities under the colonial marine economy system which sought to gain the commercial fishery resources. Consequently, they had developed in the colonial marine economy that tolerated the movements to other places for the necessity of commercial resources, not for the resource rights of local people. After 1945, this colonial practice caused many conflicts between the locals in the course of enactment of laws relating to fishing industry on the base of settlement conception. These conflicts illustrated the contradiction between the unconditional movement and collection in the colonial era and the collection right of the settlers after 1945. After all, the unconditional movements being enable to collect resources across the local borders in the colonial era were to be tolerated under the colonial commodity economy which sought to gain easily the commercial resources.

Key Words

Jamsu(women-divers), Women's movements, Conflicts, Fishing rights, Colonial marine economy, *Gaek-ju*(mediate merchant), Busan, Jeju island

교신 : 안미정 606-791 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삼동 1번지
한국해양대학교 국제해양문제연구소
(E-mail : gasirian@hanmail.net 전화 : 051-410-5272)

논문투고일 2010. 06. 30.

심사완료일 2010. 08. 05.

게재확정일 2010. 08. 10.